

종합적 · 체계적 정책제시와 방향전환을 기대하며

구 병 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1. 머리말

1 992년 하반기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민자당의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갖가지 선거공약 중에서 비중있는 것으로 '교육대통령'이 될 것을 자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6개 영역 20여 종의 개혁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의 국가사회적 비중이 막중하고 또 우리나라의 교육현상은 정책적으로나 현상적으로도 많은 문제와 갈등을 지니고 있었기에 아주 적절한 슬로건으로 받아 들여지고 40만 교육자와 천만 명 학생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는 데 아주 적절한 공약이었다고 평가된 바 있다.

그후 작년 2월 25일 소위 '문민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온 국민의 지지 속에서 취임초기 갖가지 개혁과 변화를 과감히 추진하였고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모순을 혁파하는 데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짧은 기간내에 많은 변화와 개혁이 성취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교직자나 대학 관계자들은 다른 분야의 개혁 속도와는 달리 교육분야의 혁신에 가시적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이를 중추적으로 추진하고 개혁의 구상과 선도를 담당해야 할 기구의 발족이 의외로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실망과 불만이 한동안 고조되었던 것도 솔직한 사실이다.

그러나 금년 2월 새로운 정부의 교육개혁을 구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하여 업무체제를 갖춘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펴어나 반가운 일이다. 또 그동안의 짧은 기간중에도 다양한 구상이나 대안을 다각도로 탐색하고 있음을 부분적인 참여과정에서 확인하고 흔쾌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어느 나라나 교육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없지만 부존자원은 적으면서도 인구는 많고 개

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모자람이 없다.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지만 오늘의 경제 성장이나 사회발전은 모두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급학교 교육에 전력을 온 결과라는 것은 외국에서는 물론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발전 역시 교육의 신장과 발전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는 논리에 무리가 없다. 다만 해방이후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정치사회적 불안이나 일부 오도된 교육관 그리고 정부의 교육정책상의 혼선 등으로 인해 아직도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교육이 우리의 정통성과 체질 그리고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중심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해 온 것은 사실이다. 또 현실적으로 국민적 정서나 불만 요인 가운데 교육분야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에 비추어 개혁을 통한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현상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제고는 어느 사안 못지 않은 국가적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새로 발족한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구상과 그 성취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싶다. 아울러 이 지면을 통해 필자 자신의 의견이기보다는 그동안 많은 대학인들이 논란해 온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위원회의 업무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회구하면서 몇 마디 제언하고자 한다.

그리고 긴 논란을 되풀이 할 것도 없이 정통성 있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 장식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와 같이 무성한 논란만을 거듭하다가 사라져간 과거를 되풀이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즉, 5공시절의 교육개혁심의회나 6공시절의 교육정책자문회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보다 많은 관계 당사자들의 공감을 얻는 가운데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성취를 이루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2. 대학 개혁의 기본 방향에 관한 제언

교육개혁위원회는 어차피 시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교육제도 및 현상에 관한 모든 변화와 개혁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고 기본적인 구상이나 방향 그리고 실천과제들을 통합·정리하여 수시 또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의 선진한국을 전망하면서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중핵적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제시가 기대되고 있다. 이는 고난과 시련의 역사로 점철된 우리 한국의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설계하는 역사적인 모멘트가 될 것이며 교육 이외의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처럼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개혁위원회에 몇 가지 개혁의 기본 방향에 관한 의견을 외람되게 제시해 본다.

1) 오랜 획일성·경직성에서 탈피하여 유연성과 다양성을 추구

지휘체계를 중시하고 개성과 융통성이 무시되는 오랜 군사문화는 교육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획일성이나 경직성을 심화시킨 결과, 사회적 다양성이 위축되고 자율능력이 쇠잔하며 창의적 발전이 크게 제약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교육과 같이 다양한 소질과 특성을 지닌 인간을 개발하는 사업에 있어서 획일적인 제도나 경직된 제도 운영은 인간을 규격화하고 각자의 잠재적 능력개발을 억제하는 등 비교육적 폐단이 극심한 것으로 본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교육 그 본연의 영역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오늘날 교육행정이나 활동의 준거가 되고 있는 각종 교육관계법령이 새로운 시대의 국민육구나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낡은 체

제에 머물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변화와 개혁 그리고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체제는 모든 제도에 다양성이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연성 있고 좋은 의미에서의 융통성 및 개별화를 조성하는 탄력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입장에 있다. 이는 정부의 교육정책 으로부터 일선 교실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민주사회의 미덕이라 할 수 있는 창의성이 존중되고 다양한 제도와 방법이 포용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때 교육면에서의 갈등과 혼선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본다.

2) 교육서비스의 개념정립과 학생 소비자 시대의 구현

20여 년 전 리스만(David Riesman, 1980)에 의해 예견된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학생소비자 시대(students consumerism)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대학교육에 보편화되고 있다. 오랜 유교적 전통이나 일제의 지배 그리고 30년 동안의 군사문화적 영향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물론 각급학교 교육풍토에 권위주의와 학생경시의 풍토를 토착화시켰다. 더욱이 대학원자의 수급에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원자의 쇄도로 학생모집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학에서의 학생을 위한 서비스나 복지 및 편의 등에 관한 배려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 이제는 기성세대가 마련한 틀에 맞추는 훈련(discipline)이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크게 바뀌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대학은 소비자이며 고객(clientele)인 학생들의 회구나 욕구를 존중하는 제도와 운영 그리고 풍토를 조성해 갈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3) 학벌주의, 학업성적 편중 풍토의 극복

인간의 자질 가운데 지적 측면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며 오늘날 각급학교

에서 평가 산출하고 있는 학업성적이 학생들의 모든 지력(知力)이나 고등정신능력을 정확히 측정해 낸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은 각기 소질에 따라 또는 후천적인 경험에 힘입어 충분한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다양한 직업이 나타나고 복잡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오늘의 산업화 사회 속에서 학업성적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이를 인간의 성장가능성의 유일한 지표만으로 활용하는 것은 극히 비인간적이며 또 하나의 기성세대의 횡포에 다름아니다. 차제에 교육개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철학적 배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지나친 학벌주의와 각급학교에서 학업성적만으로 학생들을 서열화시키는 그릇된 학생관이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과 협동의 조화

인간은 생래적으로 경쟁적 존재라 할 수 있다. 또 상호간의 경쟁이란 개념은 물론 전체집단의 발전 동력이 되고 그 경쟁의 과정이나 결과가 집적되어 국가와 사회발전으로 승화된다. 따라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적당한 경쟁체제는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지나친 경쟁이나 개인간의 승패를 전제로 한 경쟁은 목적과 수단을 전도시키고 끝내는 공동체와 동질 집단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비인간적 위해(危害)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는 공통의 가치를 지향한 경쟁과 병행하여 개별 인간에게 중요한 상대적 가치도 개인간 단체간의 협력이나 협동의 원리를 통해 발현되어야 한다. 인간이 경쟁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동물이라 함은 소속된 공동체와 구성하고 있는 집단 안에서 상호협력하고 공동의 선과 가치 추구를 위해 남과 협력하면서 조화하는 상호의존적 집단임을 강조하는 뜻이다.

특히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 관계로 오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속에서 경쟁과 협동을 조

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풍토의 조성이란 지 난(至難)한 작업이지만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큰 방향이 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경쟁과 협력의 논리는 대학이라는 기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오랜 세월 통제 속에서 자율 역량을 키워 오지 못한 대학들을 상당한 기간의 지원조성을 통한 경쟁기반의 구축도 없이 모든 것을 경쟁체제로만 내모는 근간의 일부시책은 전체대학의 협동이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엄청난 역기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실현가능한 대안과 당사자의 참여

개혁은 문제를 진단하고 그 치유를 위한 처방으로서의 대안이 제시됨으로써 추진될 수 있다. 지난 날 개혁을 주도하는 기관이나 주체들이 너무 이상적 대안이나 사회적 배경 및 풍토가 서로 다른 외국제도의 모방적 도입을 고집한 나머지 많은 혼선과 시행착오를 겪은 경우가 많았다. 교육제도란 장기간에 걸쳐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기에 급격한 변화는 금물이다.

또 대안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역기능이 있으므로 현행제도를 바꾸어 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현행제도와 대안 사이에 현저한 비교우위적 가치가 없다면 현행제도를 보완·존속시키는 것이 더 교육적이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세심한 검토를 통해 개혁인들이 추출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모든 개혁과제나 그 개혁방향 등은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또는 워크숍 등 절차를 통해 결론지어지는 것이 열려 있는 민주사회의 당연한 절차와 과정임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당사자들의 참여나 공감대 없이 이루어지는 성급한 개혁들이 실패하는 까닭은 그 개혁의 내용 때문이기보다는 절차와 과정의 졸속이나 하자로 인해 관계당사자들의 거부반응을 자초하는 데에도 있

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3. 대학교육의 개혁을 위한 중요 과제들

불과 5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그 체제면이나 교육의 질적 수준면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내포한 채 그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중앙통제의 획일주의나 제도의 경직성과 고질적인 대학재정난에 그 주요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학교육의 준거모델에 있어서도 해방 직후의 일본 대학 모방성향과 근간의 미국 대학 추종경향이 혼재된 채 아직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학교육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개혁되어야 할 대학교육의 과제나 변화되어야 할 대학의 풍토는 이 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우선 교육개혁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과 관련된 개혁과제 중 중요한 것 10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전국의 대학 총장들을 비롯한 많은 대학인들이 참여하여 마련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발전 10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것임을 밝혀둔다.

1) 대학의 역할 분담과 특성 개발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대학교육에 관한 획일적 규제를 배제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각 대학마다의 특성을 개발하고 전국 157개 대학이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국민의 교육수요 및 사회의 인력수요에 부응하여 대학교육의 역할을 분담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학생들의 회구를 외면한 채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 입시의 좁은 관문을 구실 삼아 특권을 누

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원 중심대학, 대학원 병설대학, 학부 중심대학, 직업 중심대학 및 특수목적대학 등으로 그 기능과 특성이 재형성 되어야 한다.

2) 학생선발 및 정원관리의 단계적 자율화

대학이 특성을 발휘하고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선 우선 학생선발이나 대학의 규모설정을 위한 학생모집 단위를 그 대학의 구상이나 계획에 일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학들이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특성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구미에 맞는 학생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모집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오랜 타성이나 자율역량과 관련하여 선별적 단계적인 자율화시책의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현대화 · 합리화

대학들은 앞서 말한 특성에 바탕을 두고 대학의 이념이나 목적 및 목표를 명료화하고 상세화하여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체적 구조를 조정하고 육성코자 하는 인간상이나 능력이 연관시켜야 한다.

학생들의 변화와 다양한 지적, 기능적 욕구를 교육과정이나 운영면에 반영해야 하며 그 탄력적 운영을 통해 교육의 생산성이나 부가가치를 최대한 신장시켜야 한다. 교수 중심의 교양이나 전공과목 설정 및 일방적 강의 중심의 대학교실을 변화시켜 더욱 다양한 수업체제나 컴퓨터 코스웨어를 비롯한 다중매체(multi media) 등의 이용을 통한 수업의 현대화 · 효율화 · 합리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4) 수업과 연구기능의 강화

각 대학의 역할분담에 따라 교수들의 수업부담과 연구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원 정원 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대학 전임교원을 연

차적으로 확충해나가야 한다. 나아가 대학교원의 연수체계를 강화하고 수업계획서의 활용 및 교수평가제의 점진적 도입이 요청된다. 그리고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연구전담 교수제도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전공분야의 연구보다는 학생들의 수업에 더 큰 비중을 둬으로써 학부위주의 교육에 치중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교육기능 강화는 세계 모든 나라의 새로운 경향이기도 하다. 마치 연구 업적이 교수역할의 전부인 양 채용과 승진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풍토에서 교수들의 수업기능의 강화는 우리나라 대학의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조교나 기술직 직원의 확보와 증원 등 교육여건이 더욱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5) 학생복지와 캠퍼스 환경개선의 촉진

세계 각국에서는 현대 복지국가 이념의 보급에 따라 이제 대학도 '삼아의 탐'에서 벗어나 생존경쟁의 현장이며 고급인력의 산실로 간주되고 있다. 학생들의 취업지향성은 날로 강화되어 아카데미즘보다는 프로페셔널리즘이 대학의 한 복판을 차지하고 모든 학생들은 장래직장이나 취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 대학교육의 과정이 미래를 준비하는 한 과정인 동시에 엄연한 생애의 한 과정이기에 대학의 사명관 기능도 크게 변모하고 있다. 교육, 연구, 봉사라는 세 기능 위에 '성장'과 '복지'라는 새로운 대학기능이 더욱 그 폭을 넓혀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복지 그 바람직한 인간적 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없이 현대학의 구실을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학복지는 아직 그 시작에 불과하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6) 시설 · 설비의 현대화

대학의 새로운 교육연구체제나 산학협동의 당위

앞에서 시설·설비의 뒷받침 없이 그 변화는 불가능하다. 전국 대학의 획일적인 시설기준도 문제이며 러니와 노후한 시설, 때늦은 실험기구 등으로 사회를 선도한다는 대학들이 현대적 기술이나 첨단 산업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뒤져 많은 시차(time lag)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공계 대학의 실습시설이나 실험기구의 낙후성은 교육의 생산성과 유용한 인재양성에 절대적 지장이 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 공인하는 사실이다.

7) 도서관, 전산소 등의 확충과 기능 강화

현대의 정보화사회 속에서 대학이 '최고학부' 또는 '국가 발전의 원천'이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대학의 심장이라고 하는 도서관이나 유용한 정보기재로 활용되는 전산실 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과 기능강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와 같은 단순한 도서 저장소에서 벗어나 CD-ROM 등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의 수집과 저장 및 그 활용이 강화되는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구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 비되고 또 전문요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전산소 역시 초기단계의 부분적인 활용에서 탈피하여 학내외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와 교육에 직접 활용되는 폭을 시급히 넓혀야 할 입장에 있다.

8) 봉사적 대학행정과 지원체제의 강화

대학의 자율은 본래부터 대학의 한 속성이며 대학교육의 오랜 전통이다. 따라서 대학은 지원조성하는 대상이지 지배하고 통제하는 대상일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학의 성장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나 간여가 부득이 했던 그 과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속적인 타율은 영원히 자율능력을 배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랜 논란 끝에 근간 교육부의 직계개편은 통제간섭의 오랜 정부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조성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주효되고 있어 반가운 일이다. 자율에 따르는 일시적 혼란이

나 그 부작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정되고 필요한 경우 대학사회의 자율적 상호 통제가 정부 통제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9) 대학간 협동 및 산·학·관·연의 협력체제 강화

전국적인 대학교육의 측면에서 대학의 많은 영역은 각 대학마다 공통적인 측면이 많고 한 단위 대학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때 대학간의 협동은 노력과 경비를 절약하고 대학간의 협조를 통해 큰 성과와 효용성을 거둘 수 있는 많은 부문이 있다.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학간 협의체가 이미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되어 왔으며 대학사회는 이 협의체를 통해 상호 협조하고 상호통제하며 그 권익을 신장하면서 다른 사회분야에 대처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의 대학교육이 그 기능이 광범해지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체나 관련연구소와의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연계체제를 외면할 수 없다. 산학협동이나 관청 및 연구소의 지원이나 협력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보다 풍요롭게 하는 기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0) 대학평가체제의 강화와 그 정착

발드리치(Victor J. Baldridge, 1983)는 대학의 기관적 성격을 ① 그 목표의 모호성, ② 다양한 구성원, ③ 느슨한 조직, ④ 관심과 이해의 상충, ⑤ 일반적인 보수성, ⑥ 결과 측정의 난점 등으로 유별한다. 대학에는 관공서와 같은 계서질서도 없고 군대조직과 같은 명령체제는 통하지 않으며 이윤추구에 역점을 두는 기업이나 산업체와 같은 단순목적이기보다는 그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따라서 그 반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치 진부하고 폐쇄적이며 보수적일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대학운영 전반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외부의 평가를 받아 자기혁신을 촉진하고 체제분석적 접근을 통해 강점을 더욱 신장하고 약점을 보강해 갈 필요성이 가장 큰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외부평가에 앞서 실시되는 자율적인 자체평가는 풍족한 지식과 경륜을 지닌 많은 교직원 집단의 지혜와 집단지(集團知)를 집결시키는 좋은 계기로 작용된다. 위와 같은 자극이나 내·외부의 평가는 대학발전의 동기유발과 교육의 품질보장을 위한 좋은 메커니즘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평가는 어디까지나 정부당국이 아닌 동료평가(peer group accreditation)이어야 하며 평가결과를 놓고 대학을 계서화(ranking) 하는 것은 대학평가의 금물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교협이 추진하고 있는 학과평가와 대학종합평가를 더욱 확충·강화시켜 가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 선진화의 요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4. 맺는말

‘개방과 국제화’ 그리고 ‘무한경쟁시대’라는 새로운 추세는 마치 금세기 말의 상징적 이슈가 된 체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긴장과 충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라마다 21세기에 대비하는 구상과 계획이 무성하고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는 국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특히 국제경쟁력의 산실이 될 고등교육의 개혁은 단순한 교육의 정상화를 초극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 일을 주도할 교육개혁위원회의 위상과 비중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걸맞은 성취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과 지원체제가 필수적이다.

지난날 무성한 개혁의 구상이나 장기 발전계획들이 빛을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 구상과 계획을 실현하고 추진하는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값진 논의와 연구들이 개혁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 선례를 수없이 경험한 바 있다. 개혁은 재정적 투자없이 그 산출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교육투자야말로 비록 그 성과는 장년간에 걸치는 시차성이 있지만 확실한 투자이며 가장 큰 승수효과(乘數效果)를 낼 수 있는 기본적 투자인 것은 확실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각급학교 교육이 극도의 재정난 속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혁의 방향이나 내용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타결되어야 할 전제는 정부의 교육투자에 관한 의지와 자세의 분명한 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김영삼 대통령은 교육 대통령으로서의 실천적 목표로 임기중에 GNP 5% 수준까지 중앙정부의 교육예산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이며 이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때 우리나라 교육체제는 상당한 변화와 향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의 개혁 과제들은 모두가 새로운 재정수요를 수반하는 것이며 교육투자의 획기적 확충없는 교육개혁은 공리공론(空理空論)에 불과하다.

끝으로 교육혁신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띠고 애쓰고 있는 교육개혁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연차적인 교육투자의 규모와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갖가지 개혁과제를 논의함으로써 합리성 내지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매년 증가해 갈 GNP의 5% 수준이 수년내에 교육예산으로 확보되고 그 중에서 국제경쟁력의 주역들을 양성하는 고등교육분야에 16%(각급학교 학생수 중 고등교육 인구는 16%) 이상의 투자가 기필코 보장될 수 있기를 강조하면서 끝을 맺는다. ▣

구병립/연세대에서 교육학 석사, 건국대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환교수, 대교협 전문위원 및 고등교육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교협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이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대학개혁을 위한 과제”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